

광주시, 국산 AI반도체 생태계 구축 선점

시험검증 조성사업 200억 확보 내달 20일까지 참여 업체 공모 광주·전남 상생1호 협력사업 반도체특화단지 유치 청신호

인공지능(AI)반도체의 성능검증을 담당하는 국산 AI반도체 기반 클라우드 환경 시스템이 전국 최초로 광주 북구 첨단3지구 AI데이터센터에 구축된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스템이 구축되면 AI데이터센터와의 시너지는 물론 민선 8기 광주·전남 상생1호 협력사업으로 추진 중인 AI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

도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K-클라우드 프로젝트의 하나인 AI반도체 시험검증 환경 조성사업 예산 200억원(국비 140억원·시비 60억원)을 확보,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과 함께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해당 사업은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광주시만 선정됐다. 내년까지 2년간 국산 AI반도체 서버망을 통한 실증 레퍼런스 확보, AI반도체의 호환성·안정성·사용성·확장성·성능을 모두 검증할 수 있는 윈스톱 실증·검증 체계 구축 등의 사업을 진행한다.

현재 국내 AI반도체는 대부분 상용화 전 단계로, 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종합성능뿐만 아니라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안정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광주시는 이 사업을 통해 공공영역에서 국산 AI반도체의 호환성·안정성·사용성·확장성·성능 등을 윈스톱으로 테스트하는 환경을 구축, AI반도체 제조회사의 투자 부담을 줄여 초기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국내 AI반도체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시는 특히 AI반도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AI 서비스 적용 실적을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국내 AI반도체 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클라우드 서비스 등 상용화 전, 국산 AI반도체의 기능·성능 검증 시행을 통한 수요시장 진출이 가능한 사례를 발굴한다. AI데이터센터 내 국산 AI반도체 기반의 실사용 환경시험 구축을 통해 실제 서비스 단계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광주시는 오는 3월 중 AI반도체 시험검증 환경 조성 사업자를 선정해 AI데이터센터 내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한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오는 3월20일

까지 신청하면 된다. 사업 계획서 평가를 거쳐 최종 수행기업을 선정한다. 공모 일정과 제안서 접수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용승 광주시 인공지능산업국장은 "AI반도체 시장의 국가적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 속 이번 사업을 통해 상용화 전 단계의 AI반도체 시험·검증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며 "광주 AI데이터센터가 국산 AI반도체 시장의 경쟁력 강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상지 기자 sangji.park@jnilbo.com

광주~나주 광역철도 건설사업 첫 실무협의회

시·도·나주시, 예타 선정 맞춘 소요시간 81분서 30분으로

광주시와 전남도·나주시는 지난 17일 광주시청에서 광주~나주 광역철도 건설사업 실무협의회 첫회의를 열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한 광주~나주 광역철도 사업은 광주 상무역-서부농수산물센터-혁신도시-나주역을 연결하는 총연장 26.46km 복선 전철로, 총 사업비 1조5192억 원에 달하는 국책사업이다. 광주~나주 광역철도가 건설되면 통행시간이 기존 81분에서 30분으로 단축돼

광주시와 전남도 주민의 생활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하고, 용역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또 실무협의회 운영 방안과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선정을 위한 시·도의 역할과 대응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대형 국책사업의 경제성을 검토,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사전조사다.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 등 평가항목을 개량해 분석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전남 경제권을 아우르는 첫 번째 광역철도 건설을 위해서는 지역민의 많은 관심과 성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상지 기자

전남도-시·군, 맞춤형 복지정책 확대 협력 강화

복지 안전망 강화·생활안정 주력

전남도가 두텁고 촘촘한 맞춤형 복지정책 강화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로 내몰린 위기가구 제로화 실현에 나선다. 전남도는 지난 17일 강진다산청련연수원에서 '복지정책 도-시·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도민에게 힘이 되는 맞춤형 복지정책 확대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올해의 복지정책 추진 방향과 사회복지, 노인·장애인 복지 등 부문별 시책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시·군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전남도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해 약자복지 안전망 강화와 어르신·장애인 생활안정 보장에 주력하기로 했다. 도민의 든든한 이웃인 '우리동네 복지가동대' 가구당 지원금도 인상에 3만

8000가구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전남사회서비스원과 연계해 민간 참여 영역을 넓힌다. 복지 사각지대 제로화를 위해 24시간 위기가구 지원콜(120번)을 운영하고 발굴시스템을 통한 집중 관리에 나선다. 위기가구는 '선 긴급 지원, 후 검증'하고, 보호가 필요한 가정은 통합사례로 관리한다. 또 저소득층 자산형성(통장사업),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가사·간병방문 지원, 청년마을 건강사업으로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돕는다. 특히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위해 고독사 실태조사, 은둔형 외톨이 시범사업을 실시해 새로운 복지 수요에도 적극 대응한다. 복지 취약지역에 행복을 배달하는 찾아가는 전남행복버스도 주 4회로 확대해 210개 마을을 순회할 계획이다.

최황지 기자

광주시, 24일까지 재난 위해요인 특별 안전점검

광주시는 최근 각종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20일부터 24일까지 특별 안전점검 주간을 운영, 재난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은 덕남정수장 유출밸브 고장에 따른 단수사고, 도시철도 2호선 공사 중 상수도 누수사고, 약탕기 폭발로 인한 인명·물적 피해 등에 따른 것이다. 해당 기간 광주시는 실·국·본부장·사업소장, 자치구는 부구청장 주도로 점검을 추진한다. 점검 대상은 재난취약시설, 건축공사

장, 소관부서 관리시설 등이다. 분야별 계획을 수립하고 민관 합동 자체점검반을 구성해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구조물과 시설물의 침하·균열·붕괴 등 결합 여부 △해빙기에 따른 시설물 안전과 유지관리 실태 점검 △범·규정 준수 여부 등 안전관리 실태 전반이다. 안전점검 결과 단순·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한다. 즉시 시정이 어려운 사항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조치를 한 뒤 예산을 투입, 보수·보강하기로 했다.

박상지 기자



전남도, 국립해양수산물박물관 전문가 세미나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지난 17일 안도 생활문화센터에서 박물관의 내실화 및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열린 '국립해양수산물박물관 전문가 세미나'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국립해양수산물박물관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관련기사 10면

전남도 제공

전남도, 축산 사료 구매자금 무이자 지원... 전국 최초

2786농가에 용자 이자 24억 지원 축산농가 안정·경영난 해소 기대

전남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축산 사료 구매자금 용자 이자를 농가에 지원한다. 전남도는 축산농가 경영 안정과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 축산농가 사료 구매 대출금 2446억원에 대한 이자 24억 원을 무이자로 용자 대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비 증가, 한우 산지 가격 하락, 고물가·고금리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한 소비 위축으로 소득이 줄어든 축산농가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지원 대상은 2022년 사료구매자금 대출을 완료한 2786개 축산농가다. 용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1%를 지원해 축산농가는 이자 부담이 없어지게 된다. 전남도는 또 농림축산식품부에 배합사료 가격안정자금 조성, 사료 가격인상차액 지원, 사료 구매자금 지원 조건 완화 등 축산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사업 시행을

건의했다. 박도환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생산비 증가와 소비 위축이 맞물려 어려운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과 금리 부담 경감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축산농가 안정을 위해 정부 건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올해 축산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기존 사업을 확대하고 신규 등 27개 사업에 175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황지 기자

전남도, 행안부에 '가뭄 극복' 특교세 741억 지원 요청

김성호 본부장 주암댐 현장 점검

사상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 전남도가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했다. 전남도는 전남 순천 주암댐 가뭄 현장 점검에 나선 행정안전부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에게 가뭄 극복을 위한 특별교부세 741억원을 포함해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남지역은 지난해 총 강수량이 846mm로 평년(1390mm)의 60%에 그쳤다. 올 들어서도 2월 현재까지 78mm의 강수량을 기록해 가뭄 해갈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 18일 김성호 본부장이 방문한 주

암댐은 광주·전남 최대의 광역댐으로, 전남 동남부 일원에 하루 160만t의 생활·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현재 저수율은 28.7%로 2015년 이후 4차례 가뭄 '주의' 단계에 진입했으며, 지난해 8월부터는 최초로 '심각' 단계에 진입했다. 이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는 1일 46만톤이던 용수 공급을 '유지용수 12만, 생활·공업용수는 34만톤'으로 감량하고, 장흥댐과 연계한 공급량 조정 등을 통해 위기까지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하고 있다. 이날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김성호 본부장에게 50년 만의 기록적인 가뭄으로 도민이 고통 받는 상황을 설명했다.

문 부지사는 "김영록 전남지사의 특별 지시로 예비비, 특교세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가뭄 해소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예산이 소진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완도 제한급수 지역 식수 운반과 해수담수화시설 설치, 관정 개발 등 가뭄 해소에 특별교부세 741억원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중앙정부의 지원과 별도로 20% 물 절약 운동 전개, 산업단지 공업용수 절감 방안 마련 등 가뭄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본부장은 "지역의 어려운 현실에 공감한다"며 "중앙정부에서도 가뭄 극복을 위해 전남도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최황지 기자